

# 大學院中心大學의 현황과 전망

金 承 祚

(서울대 航空宇宙工學科)

## 1. 들어가는 말

『大學教育』誌에 실릴 大學院中心大學의 현황과 전망 및 과제에 관한 청탁을 받고서 과연 이러한 글을 쓸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에 많은 망설임이 있었다. 대학원중심대학을 지향하는 서울대학교에서 20명 가까운 대학원생을 지도하고 있으면서도 대학원중심대학이라는 命題의 定義, 必要性, 問題點, 전망과 과제 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여 왔다기보다는 단지 현재의 여건에 一喜一悲하면서 불평불만을 말하고 대학원교육 중 이공계(특히 몸 담고 있는 공학계)라는 일부분의 特性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여러 분야를 概觀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쓸 수 있을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철저한 客觀性 유지라는 科學技術 論文에만 익숙한 필자로서, 과연 필자 개인의 의견을 감정에 흐르지 않고 냉철하게 기술하여 讀者 여러분의 동감을 얻어낼 수 있을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既刊된 『대학교육』지의 여러 훌륭한 글들이 이미 관련된 많은 의견들을 포용하고 있으며, 이번 대학원중심대학 관련 특집으로 정해진 다른 필자들에게 의뢰된 원고 제목들로부터 유추될 수 있는 내용들이 서로 연관되고 나아가서는 비슷한 논조 및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과연 독자들에게 필요하고 또한 새로운 글을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가가 고민이었다. 국내 대학 및 대학원들의 현실적 진단 및 문제점으로는 누구나 언급하고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현재 유행어처럼 되다시피한 교수 1인당 학생 부담 과다, 정부 및 사회단체의 대학교육 및 연구관련 비용 지원 인색, 연구 기자재 부족, 도서관 장서 부족 및 도서 예산 절대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당연히 위의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교수 확충, 연구·교육 장비 구입 및 관련시설의 대폭 지원, 도서 구입비 확대 등등으로 처방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대학 사회에서 영원한 진리로 통하는 '學問의 均衡發展'이라는 또 하나의 유행어를 통하여 근간의 일부 이공계 대학의 확대·발전에 소외된 분야들에게도 공평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일갈하면 금상첨화의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대학원중심대학 활성화의 해결책일까? 우리는 너무나 原論的 이론을 내세워 교육 및 연구 관련 집단의 자체적인 문제점 및 解弛함을 차치하고 모든 책임을 외부로 轉嫁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닐까? 지금 상태에서 教授充員, 연구관련 豫算의 擴大가 따른다면 훌륭한 研究集團, 大學院이 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우리 교육·연구 집단이 정말 이러한 전문적인 연구 집단, 학문의 連續性을 유지할 세계적인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는가? 혹시 우리의 조직, 제도 및 구성원 각각의 쉽게 고쳐지지 않는 자세 혹은 관행이 문제는 아닐까?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현재의 우리의 대학원중심대학의 현 주소가, 주위의 여건보다도 이 조직의 구성원인 우리들, 즉 교수들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앞서 언급한 너무나 당연하고 누구나가 공인하는 우리의 소망 리스트인 학생-교수비 개선, 연구지원 확충 등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물론 여기에서 언급하는 논의들은 때로는 단편적이고 극단적인 경우가 있을 것이며 어느 일방의 특수한 경우를 針小棒大한 경우도 있겠지만 전체 논리 전개에 관점에서 특수성을 살렸다는 것을 감안하고, 또한 교수들로 이루어진 조직의 여러 문제는 결국 교수들이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 따라 때마침 구득한 수필집<sup>1)</sup>의 일부분을 인용하면서 서두를 마치고자 한다.

“……최근의 여러 가지 논의 중에서 가장 음지에 놓여 있는 분야가 바로 교수의 올바른 像에 대한 논의이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한마디로 대학사회에서 교수의 올바른 상을 논의할 수 있는 계층은 바로 대학교수뿐이라는 것이다. 교수에 대한 직원들의 논의는 무조건 인격모독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으며, 학생들의 논의는 마치 자식이 부모를 비판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는 것으로 고려되며, 행정당국은 오히려 교수들의 눈치를 보아야 할 정도이며, 동창회의 논의는 어디까지든 친목의 단계를 넘어설 수 없다. 교수만이 교수를 논할 수 있다는 사실, 거기에다가 정치권·경제권·사회권의 논의가 지금까지 악용되어서 모든 종류의 논의를 일단 불신과 거부감으로 받아들이기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수도 이 사회의 한 계층을 유지하고 있다면 당연히 각계각층으로부터의 충고, 비판, 격려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수는 자체 평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개인에 있어서도 자기 반성이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교수사회란 계층은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교수만이 교수를 논할 수 있다는 현실은 교수 사회의 자량이 아니라 {한국적인 비극일 뿐이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무엇인가? 그것은 敎授像을 논하는 교수는 누워서 침 뱉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교수 사회의 올바른 자리매김에 대한 논의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누군가는 제 얼굴에 침 뱉기를 해야 한다.”

## 2. 大學院中心大學의 개념과 그 성격

대학원중심대학이라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근원했는지에 대해서는 필자의 짧은 지식 및 자료로는 단정하기 힘들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대학 형태의 출발인 중세 유럽의 대학 출현 및 설립목적 자체가 바로 대학원중심대학이었다고 생각된다. 즉, 학문의 지속 발전이라는 목적으로 일부 소수의 학문에 뜻을 둔 엘리트 학생들에게 교수들이 평생의 학습 및 연구한 학문을 전수해 주고, 이들 학생이 다시 다음 세대로 학문을 이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산업이 발전하고 사회가 다양화·전문화되면서 종전에는 학문하는 사람들만의 영역에 있었던 지식들이 일상생활에도 크게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 대학에 축적된 지식을 조직적으로 습득시켜 사회로 진출케 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것이 미국에서 출현한 대량 국민교육기관으로서 학부중심대학이 아닐까 한다. 미국의 일부 주립대학들은 5만 명 안팎의 등록생 수를 자랑하면서 마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의한 자동화 공장의 제품처럼 졸업자를 양산하여 소비적인 사회로 내보내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이에 반해 하버드, MIT, 스탠퍼드, 칼 테크 등의 대학원중심대학이라 할 수 있는 대학들은 전체 등록생의 30%에서 50% 이상이 대학원생으로, 아마도 이러한 유형의 대학으로 지향하는 것이 우리의 대학원중심대학의 모형이 아닐까 한다. 또한 유럽의 대학교육제도를 본뜬, 강좌제를 중심으로 교육·연구가 이루어지는 계국대학 후신들인 동경대, 경도대학 등이 대학원중심대학의 또 하나의 지향 목표가 될 수 있다.

1) 황필호, “한국의 대학교수, 무엇이 문제인가”, 『자기질학을 가지고 살려는 사람에게』, 도서출판 산호, 1992, pp. 284~309.

그러면 대학원중심대학을 지향했을 때, 기존의 학부중심대학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선 가치적으로 대학원 재학생 수의 전체 학생수에 대한 비율증가이다. 대학원의 주요목표가 연구이므로 학부중심대학과 달리 연구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즉, 대학교수의 기본적인 3대의무가 교육, 연구 그리고 봉사라고 볼 때, 이 3대 기둥 중 교육이 제일 강조되면 학부중심대학이라 할 수 있고 연구가 교육보다도 더 우위에 놓이게 되면 대학원중심대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중심대학은 교수 개개인이 연구에 몰두하여야 하므로 교육 중심의 학부중심대학보다는 교수의 숫자가 많아야 할 것이다. 이에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것이 교수의 의무강의시간 감소이고, 이렇게 확보된 시간은 대학원생 지도 및 연구활동에 쓰여지게끔 된다. 이로 부터 훌륭한 연구논문 생산으로 연결되고 또한 이는 대학원중심대학 교수들에게 부가되는 당연한 의무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에 의해 생산되는 논문은 당연히 '우물안 개구리식의 내용'이 아닌 세계적인 수준이어야 하고, 그 결과 대학원중심대학 구현은 우리 대학의 學問水準 世界化宣言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진정 대학원중심대학으로 정의될 수 있는 대학은, 일단 앞에서 언급한 대학원대학으로서의 외형적 기본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한국과학기술원과 포항공과대학이라 할 수 있고 이들은 모두 이공계 단과대학으로 분류된다. 한국과학기술원은 3개 정부의 의지로써 초법적으로(여타의 문교부 허가 대학에 비해) 탄생되었고 집중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해 왔다. 이 대학은 설립 초기 대학원 과정만이 운영되어 오다가 1989년 과학기술대학과 합병하여 지금은 대학과정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이 대학은 대학원생 1명당 학비와 숙식비가 경제기획원 예산으로 책정되어 100% 지원되고 있으며, 학생 1인당 석사·박사별로 일정액씩 지도 교수에게 연구 재료 구입비로 배당되고 있다. 합병 전까지는 의무강의시간이 주당 3시간(즉, 1과목)이었으며 지금은 학부 담당강의의 3시간이 추가

되어 운용되고 있다. 적은 강의 부담시간으로 인해 남는 의무근무시간은 강력한 연구업적 심사등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1년간의 연구활동 평가에 따라 보너스성 인센티브 금액에 차등을 주는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포항공대는 포항제철이 연구중심대학이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걸고 설립한 사립대학으로 국내 대학으로는 획기적인 건물, 시설 및 연구장비들을 갖추고 있으며 해외에서 중견 교수 및 연구원으로 종사하던 인재들과 유능하고 폐기있는 젊은 두뇌들을 교수로 유치하여 강력한 연구집단이 될 수 있는 한계 질량을 만들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대학들을 빼고 나면 나머지 대학은 현재 대학원대학이라고 부르기에 어울리가 먼 대학들이 대부분이다. 대학원생이 많다는 외형적인 면 이외의 교수수, 시설연구장비 면에서는 학부중심대학에서 벗어난 면이 없다. 그나마 그 중 가장 여건이 좋다고 볼 수 있는 서울대학교는 지난 1987년부터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대학원중심대학화라는 목표를 세우고<sup>2)</sup> 이의 실현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기에 진행 사항을 살펴보고 그 제도적·현실적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1987년의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에서는 3단계의 계획수행기간을 두고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원중심대학을 확립하기 위한 제 1단계(1987~1991년)는 다음과 같다.

- ① 학사과정 정원 감축 및 교수·직원 증원
- ② 학부제 도입
- ③ 연구처 신설
- ④ 연구 안식년제도 도입
- ⑤ 연구평가 강화
- ⑥ 국제적 수준의 정기 학술지 육성
- ⑦ 박사과정생의 전일등록제 및 연구등록제
- ⑧ 조교, 조수 및 연구원제 확립
- ⑨ 도서관 확충
- ⑩ 병역 감면 혜택 확대
- ⑪ 대학원중심대학 지정 등

제 2 단계(1992~1996) 및 제 3 단계(1997~20

2) 서울대학교, 『대학백서』, 1987; 『서울대학교 발전 장기계획』, 1987.

01)는 위의 각 항목들의 계속 수행 및 강화 내지는 내실화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제 1 단계가 마감되는 시점에는 위의 ①, ③, ⑨, ⑩만이 그나마 이행되고 나머지는 대내적 및 대외적인 원인으로 인해 별로 진척이 없어서 발전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이들 계획이 전부 시행되었더라도 대학원중심대학의 基盤이 제대로 세워졌을까에는 필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대학원중심대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인 교수들에게 研究 動機를 부여하는 제도(⑤번에 해당되나 구체안이 없음)가 거의 없이 교수를 여러 의미에서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사항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큰 발전인 학생 대 교수비의 개선은<sup>3)</sup> 고무할 만하다(〈표 1〉 참조). 물론 장기계획의 목표인 11.7(이 수치의 한국 상황에서의 문제점은 추후에 논의할 것임)에는 못 미치지만 미국의 주립대학교 수준에는 육박한다고 보이고, 또한 20% 가량의 강의를 비전임 시간강사에게 맡기고 있으므로 이미 약 1:16의 비율로까지 학생-교수비가 좋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외형적 강의부담으로부터의 여유로움은 연구활동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표 1〉에서 보여주는 학생교수비 개선이라는 외형적인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중심대학으로서의 별다른 연구업적이 뒤따르지 않는 큰 이유는 연구의 주체인 교수 및 대학원생의 구태의연한 관행이 여전히 교육 중심의 학부중심대학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 첫째가 아직도 상당수의 교수들이 수업이 있는 날 및 시간만 출근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전공분야에 따라 연구 및 강의 준비를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이렇게 강의 이외에는 학교에 있지 않는 교수가 자연스러운 行態라면, 과연 강의를 있을 때만 출근하는 시간강사와 무엇이 다르며 〈표 1〉에서 본 바와 같은 많은 수의 대학원생들은 어느 시간에 무슨 지도를 받으며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교수와의 연구활동에 따른 빈번한 접촉으로 교수의 그간 연구 경력에 의한 경험과 학생의 새로운 사고에 의한 새로운 발

〈표 1〉 서울대 교수 학생 현황

구 분	등 록 학 생 수*				교수수*	학 생 교 수 비		
	학부	대 학 원		계		학부	대학원	계
		석사	박사					
1987	24,065	5,001 1,596	6,597	30,662	1,291	18.6	5.1	23.7
1988	21,570	5,049 1,634	6,683	28,253	1,299	16.6	5.1	21.7
1989	21,354	5,271 1,897	7,168	28,522	1,321	16.2	5.4	21.6
1990	20,441	5,187 2,118	7,305	27,746	1,321	15.5	5.5	21.0
1991	19,969	5,412 2,175	7,587	27,556	1,323	15.1	5.7	20.8
1992	19,070	5,701 2,269	7,970	27,040	1,346	14.2	5.9	20.1
1993	20,424	5,767 2,305	8,072	28,496	1,333 (1,403**)	15.3 (14.6**)	6.1 (5.8**)	21.4 (20.4**)

\*특정 시점에서의 숫자이므로 자료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음.

\*\*현재 중원 및 결원 보충으로 모집 중인 인원(70명)을 포함시킬 경우.

3) 서울대학교, 『대학백서』, 1988, 1989, 1990, 1991.

건 및 논리가 결합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학생논문지도라 일컬을 수 있겠는가? 만일 학생따로 교수 따로 지내다가 석·박사 논문 발표회에서 지도교수가 학생의 논문제목의 의미조차도 처음 알게 된다면 연구 중심의 대학원대학 목표는 어디에서 달성될 것이며, 대학원중심대학 교수의 의무 중 으뜸인 연구 의무 수행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특히 임용된 지 얼마 안 되는 조교수, 부교수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당연시된다면 대학원중심대학을 추구한 지 6년여가 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연구업적이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지금도 상존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敎授 勤務管理制度에 기인한다. 우선 대학원중심대학의 연구 중요성에 비추어 재직 교수의 昇進 및 任用規程이 느슨하기 짝이 없다. 7년여 전에 정신문화원 연수에 참가한 적이 있었다. 연수 마지막 토론타일에 있게 된 원장의 발언 중에 “우리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은 각 학과마다 반수 이상이 정교수이고 심한 경우는 재직 교수 전원이 정교수인 학과도 있으며 논문 교육 및 연구 능력 부족으로 승진 못하는 교수가 거의 없는 것을 보면 필시 서울대학교 교수 전원이 세계에 유례없는 우수한 인재들이거나 아니면 순엄터리 승진제도의 결과가 아닐까.”라는 대목이 기억난다. 실제로 우리 현실을 보면 부교수 및 정교수 승진시 논문발표 의무, 즉 지난 2년간 국내외 학회지 200% 논문발표라는 규정은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의 수백 개에 달하는 각종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에, 실제로 투고된 논문의 게재 거부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학회지가 대부분인 현황을 고려한다면 학회지 논문 게재 의무 자체가 큰 부담이 아니다. 물론 이제는 상당한 수준을 갖추고 경쟁적인 그리고 비판적인 논문심사가 이루어지는 학회지도 많고, 궁극적으로 국내외 학회지들이 세계 수준이 되도록 키워야 하고 또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회지들이 이렇듯 느슨한 논문심사의 산물이고, 이렇게 게재된 논문들 모두가 200%의 대상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어느 누가 논문발표 의무규정에 연연하겠는가? 그렇다고 강

의 능력을 엄정히 평가하여 승진에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대학 본부는 단지 교수 개인별 담당 학점 수만 집계하여 관리하지 실제로 수강생 숫자, 이에 따른 강의부담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강의 과목 자체의 필요성 혹은 강의 내용의 충실성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수강생이 몰릴 경우에 조수의 추가배정이라든지 강의부담 및 비용(유인물 등)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거의 없다.

대학원중심대학에 대한 社會的 認識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도 현황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교수와 학생이 모두 사회의 일원이라는 관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우선 교수가 학교에서 강의 이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으며 또한 있어야 한다는 사회의 인식이 필요하다. “오늘 강의가 있는가?”, “방학이니까 이제 편하겠구나?”, “요즈음 방학이라 학교도 가지 않는데 무얼하고 지내지?” 등등의 질문이 사회로부터 당연시되고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 대답하는 상황은 대학원중심대학의 활성화가 아직 멀었다는 것을 확인케 한다. 또한 대학원 학생들도 유사한 상황이다. 가족들로부터 “수업이 없는데 왜 학교를 가는가? 주말인데 집안 일이나 도우라. 방학인데 학교에 가서 무얼하는가?” 등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공부와 연구에 더욱 매진해야 할 미완의(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의 길에 자진해서 들어섰다는 의미에서) 대학원생들을 대학을 졸업했으니 이제 완전한 사회인으로 생각하고 또한 의무를 부가한다. 외국에 유학중인 학생들이 그곳의 우수한 시설 및 교수진의 덕택으로 많이 배우고 빠른 시간에 좋은 논문을 쓸 수 있게 되는 면도 있지만 외국에 있기 때문에 많은 행사들, 즉 가족의 생일, 친구 및 친지의 결혼식 참석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면제 받기에 학습 및 연구에 몰두할 수 있다는 것이 국내에서보다도 더 좋은 논문을 짧은 기간에 쓸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된다.

大學院大學 活性化의 또 하나의 걸림돌은 교육당국의 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차관 자금으로 연구 기자재를 구입해 본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먼저 필요한 장비를 학부 실험실습에 얼마의 시간을 사용할 것

인가를 기입한다. 이러한 관행은 아직도 대학원생들의 연구 기자재 및 장비 구입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있지 않다는 현실 확인이다. 또 다른 저혜요인은 有給助教라는 제도이다. 예전에는 전일제 직업인, 생활인으로서의 유급조교가 있었고 이들은 일주일 내내 학과의 사무적인 일 혹은 실험실습과정 운영에 참여했다. 그러나 현재는 대학원생이 대단히 많은고로 유급조교를 맡고 있는 사람은 바로 박사과정생이고 때로는 상당수가 석사과정생이다. 이들은 공무원 호봉에 상응하는 월급, 상여금, 정근수당, 연구비 등을 100% 받을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및 기타의 각종 혜택도 누리는 정식공무원이다. 그러나 이들 소수의 대학원생에게 일반학생에 비해 차이가 큰 혜택이 돌아가는 이러한 제도의 운영은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우선 대학원생으로서 3개 과목 이상의 수업(즉, 9시간)을 받고 또한 자기의 논문연구를 수행하면서, 규칙상 전일제 공무원의 의무근무 44시간을 채울 수 없기에 대부분(예외도 있지만) 적당한 시간만 실제로 근무한다. 어떻게 보면 학업지속과 생활보장을 동시에 이루면서(실제로는 둘 다 충실치 못하게) 지내다보니 논문연구 집중력이 떨어지는 반면, 생활의 안정성이라는 매력으로 인하여 별일이 없는 경우 조교의 연속임용제한시점까지 계속 근무케 되고 이에 따라 학위완료 시기가 늦어지게 된다. 대학원 과정을 장기적으로 유지한다고 하여 결코 좋은 논문이 나올 수 없기에 대학원생들은 가능한 한 빨리 졸업하고(물론 박사학위자로서 요구되는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서) 사회로 진출하여 제대로 된 사회인으로서 공헌을 해야 한다. 이러한 1인2역의 조교시절 관습은 이후에 전임교수가 되었을 경우 습관적으로 교수의 의무 근무시간을 방만하게 처리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또 하나의 문제는 유급조교와 여타 조수 및 연구조교 보수의 너무나 큰 격차이다. 현재 국립대학 유급조교는 호봉별로 조그마한 차이가 있지만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빼고도 총평균 100만 원 정도인 데 반해, 현재 조수(즉, T.A.)의 평균보수 월 10만 원 및 비슷한 금액의 연구보조원 지급액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물론 여유가

있어 이러한 혜택이 대학원생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과, 상응한 일을 한 연후에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신성한 근로원리에 비춰 볼 때 이러한 혜택은 보수를 줄여서라도 여러 학생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져야 한다고 본다. 전임직으로 유급조교를 고용하여 꼭 일을 시켜야 한다면 정식직원을 고용케 하는 것이 타당하지, 대학원중심대학의 연구 주축인 대학원생의 전일제 조교임명은 재고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인 것이다.

### 3. 大學院中心大學의 활성화 대책

#### 1) 制度的 補完

대학원대학이 정상화되어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결과, 우수한 학문후속세대의 양성 및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는 사회 및 산업계를 선도할 인재공급을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대학운영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

#### ① 대학원 학생 교육 및 연구 지원

대학원중심대학이라고 하려면 우선 그 주체인 대학원생의 관리 및 지원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장학금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적어도 학부생 수준(장학금 수혜자 비율 면에서)의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조교(국립대학 경우) 제도를 없애 그 혜택이 여러 명의 대학원생에게 돌아가도록 해서 수혜범위를 넓혀야 한다. 즉, 한 명의 조교 대신에 3~5명의 조수(T.A.)를 확보하고, 강의부담 및 수강생 숫자를 고려하여 일괄 平等分配式 T.A. 배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학원생의 연구환경 개선 및 교수의 연구지도 부담을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전공에 따라 특성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대학원생들이 동료들과 연구진행 경과 및 결과 등에 대해서로 활발하게 토론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장소 및 시설에 대한 학교당국의 공식적인 예산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공계 대학원의 경우 연구실 및 실험실에서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또한 지도교수와 협의 및 상담이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실험실이기애 이들이 연구할 수 있는 책상, 의자, 난방 등에 공식적인 예산을 뒷받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또한 지금처럼 일과 후나 주말 휴일에 실험실 출입을 할 때 소위 '여조물 사용신청서'를 매번 제출하여야 하는 것도 문제이다. 현재 교수나 학생 공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좋아서 하지 말라고 말리는 데도 연구에 몰두하는 사람은 적다. 특히 지금은 예전처럼 학문하고자 하는 극소수의 교수 및 학생의 시대가 아니고 수많은 교수·학생이 혼재하고 있는 대량교육시대라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춘삼월 좋은 날씨에 온갖 개인적인, 흥미에 찬 일들로 사회가 불려내고 있는 때에 겨우 마음잡고서 어두운 실험실을 찾을 때 학교당국에서 격려는 못할 망정 제한만을 해서야 되겠는가?

## ② 교수의 연구부담

다음은 교수의 연구부담 고려에 관한 사항이다. 대학원중심대학의 교수답게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 교수들의 고충사항 하나가 대학원생 지도부담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로 대학당국에서 관리하는 교수부담은 매학기 몇 학점 강의하는가의 주당 강의부담 시간에 관련된 것뿐이다. 공식적인 의무시간은 주당 10시간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3학점이 1과목이므로 3과목, 즉 9학점을 부담하던 의무를 채운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대학원생 연구지도에 투입되는 시간부담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대학원생 1명과 논문 하나를 만들기 위해 기본적으로 연구시작부터 이의 진행 검토 및 의논,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까지 이르는 데 엄청난 시간이 투입된다(물론 정상적인 연구지도인 경우). 그리고 덧붙여 이들 논문을 해외에 투고할라치면 1, 2주일 써름해야 하고 해당 외국어가 익숙지 못할 경우 적절한 표현에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 따라서 1년에 석사 2~3명, 박사 1~2명을 배출하고자 하면 그 논문지도에 드는 시간은 엄청나고 이에 대한 베리는 대학원중심대학의 또 다른 측면에서의 정의인 세계적인 교육 및 연구 배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것의 해결방법으로는 현재 석·박사 학생들

이 신청하는 논문학점을 實際 負擔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즉, 특정 교수에게 신청이 된 논문학점 합산이 3학점인 경우 주당 1시간, 6학점 주당 2시간, 9학점 주당 3시간, 그리고 12학점 이상의 경우 주당 4시간의 강의부담으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물론 12학점 이상의 지도학점은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관점에서 더 이상 강의부담으로 고려될 필요가 없고, 이는 특정교수가 능력 이상의 많은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자체케 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일례로 현재 지도대상에 있는 박사과정이 2명이고(각 3학점×2명=6학점) 석사과정이 3명이면(각 2학점×3명=6학점) 총 지도부담학점이 12학점이 되고, 이 경우 해당교수가 의무강의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6시간, 즉 3학점짜리 2과목의 강의만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학교의 현행 제도처럼 석·박사 필수학점 이수 이후 수료케 하는 경우는 약간의 규정 수정이 필요하리라 본다. 특히 박사과정의 경우 통상 2년, 즉 4학기 수료 후에는 등록을 전혀 하지 않아 학생신분이 아니므로 도서관 출입도 특별허가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규칙에 비추어 보면 연구실 및 실험실 무상출입도 제한받게 되어 있다. 사실 수료 후의 대학원 학생은 그야말로 연구에 몰두하는 기간이고, 그 지도교수에게 시간적 부담(이공계의 경우 연구장비 운용 및 재료비의 부담을 더해서)이 가장 큰 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수료 학생들에게 논문학점 3학점을 계속 신청케 하고(전공에 따라 실제로 등교하여 실험실에서 지속적 연구가 필요없는 경우는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기성회비만 1/3을 내게 하며, 학생증 내지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줌으로써 교내의 제반 편의 시설 및 도서관 출입이 자동적으로 가능케 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조사한 1991년 2학기 및 1992년 1학기의 서울대학교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및 공과대학의 교수당 학점 부담, 수강생을 고려한(교양과정, 전공과정, 대학원과정 등으로 비중을 달리하여 환산도 하였음) 평균 학생부담이 (뒤의 <표 2> 참조) 의외로 적게 나타나 있다. 대학원 학생지도, 강의 등으로 상당히 바쁜 교수들의 학생부담이 이

〈표 2-1〉 서울대 교수 강의부담의 평균 비교

① '91 학년도 2 학기

(교양 : 1.0, 전공 : 1.0, 대학원 : 1.0)

대 학 명	학과수	교수수	학생수	학점	학생수×학점	학점/교수	학생×학점/교수
인 문 대 학	15	138	12,906	1,142	38,325	8.2	277.7
사회과학대학	10	94	10,317	705	30,951	7.5	329.2
자연과학대학	12	140	13,579	1,062	43,112	7.5	307.9
공 과 대 학	19	155	13,393	1,267	36,652	8.1	236.4

② '92 학년도 1 학기

(교양 : 1.0, 전공 : 1.0, 대학원 : 1.0)

대 학 명	학과수	교수수	학생수	학점	학생수×학점	학점/교수	학생×학점/교수
인 문 대 학	15	136	13,303	1,102	39,866	8.1	293.1
사회과학대학	10	93	11,174	702	33,522	7.5	360.4
자연과학대학	12	134	15,466	1,057	48,454	7.8	361.6
공 과 대 학	19	161	16,014	1,302	44,608	8.0	227.0

〈표 2-2〉 가중치를 둔 강의부담 비교

① '91 학년도 2 학기

(교양 : 1.0, 전공 : 1.5, 대학원 : 2.0)

대 학 명	학과수	교수수	학생수	학점	학생수×학점	학점/교수	학생×학점/교수
인 문 대 학	15	138	12,906	1,142	47,421	8.2	343.6
사회과학대학	10	94	10,317	705	41,862	7.5	445.3
자연과학대학	12	140	13,579	1,062	56,695	7.5	404.9
공 과 대 학	19	155	13,393	1,267	58,788	8.1	379.2

② '92 학년도 1 학기

(교양 : 1.0, 전공 : 1.5, 대학원 : 2.0)

대 학 명	학과수	교수수	학생수	학점	학생수×학점	학점/교수	학생×학점/교수
인 문 대 학	15	136	13,303	1,102	50,184	8.1	369.0
사회과학대학	10	93	11,174	702	46,746	7.5	502.6
자연과학대학	12	134	15,466	1,057	65,094	7.8	485.7
공 과 대 학	19	161	16,014	1,302	72,866	8.0	452.5

렇게 적게 나오는 이유는 바로 석·박사과정 지도에 대한 부담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이다.

③ 교수증원과 관리제도

3년여 전에 미국 오스틴 소재 텍사스대학이 엄청난 금액의 석유관련 기금으로 수십 개의 백만불짜리 석좌교수직을 만들어서 전세계적으로 우수교수들을 스카우트하는 기사가 『뉴스위크』지에 게재되었다. 그 중 기억나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는 “돈만 가지고 일류대학이 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돈없이 일류대학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높은 교수학생비만 가지고 세계 일류대학이 될 수는 없지만, 낮은 교수학생비로써는 세계적인 일류대학이 될 수 없

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수 학생비가 왜 높아야 하는지 또는 높을 때에 생기는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은 이미 너무나도 많이 언급되고 회자되었기에 여기에서는 이 너무나도 당연한 [정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고, 현실에 부딪혔을 때 어떤 결과가 올 수도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이렇게 반대의 각도에서 이 문제를 조명하는 것은 교수학생비를 높이지 말라는 주장이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교수만 늘리면 버릇이 잘못 붙여지는 무위도식형의 직장인이 많이 생겨나고 이로부터 적절치 못한 학문 후속세대가 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4만 명에 육박하는 대량 교수시대에 우리 서울대학,



특히 대학원중심대학이 일단 추구하고 있는 교수학생비는 1:11이다. 이때에 많이 언급되는 MIT, 스탠퍼드, 하버드, 칼 테크 및 동경대학 등은 이보다 더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 대학의 교수들은 우리 대학에서의 교수와는 다른 체계 그리고 사회적 인식 및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본다. 2년여 전에 필자의 대학에서의 일이다. 교수회의시에 학장이 신입교수를 인사시키는 것이 관례이기에 신입교수들을 차례로 호명하여 인사시키던 중 신입교수 한 분이 대답이 없어서 재차 확인을 하자 주위의 한 분이 “과학기술처에서 피치 못할 중요 회의가 있어 못 왔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좌중의 교수들이 모두 웃었다. 그러나 이 일화는 매우 시사적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조교수는 미국의 조교수 및 종신팀용되지 않은 부교수 그리고 일본의 강좌 주임교수 아래에서 교육·연구하는 조교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의 조교수는 이미 사회기관, 관청, 회사 등에서 종신팀용 보장된 정교수와 다름없이 생각되고 대우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지와 사명감에 따라 열심히 업적을 내면 되지만, 제도적인 승진 임용 등의 부담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6년만에 닥쳐오는 승진시에도 200% 논문게재라는 부담이 있지만, 대부분이 게재율 100%의 논문만으로도 채울 수 있으니 단지 승진 서류 신청일이 언제인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승진이 안 된다해도 보수나 책임소재, 다른 어떠한 사항에도 변화가 없으니 매력도 별로 없고 단지 물경 모르는 외부인사가 승진했느냐고 자꾸 물어볼 때 약간 귀찮은 정도뿐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교수생활이 10년 이상 아니 20년 이상 남은 교수들이 특별히 헌신하여 처리해야 될 일이 없으면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이러한 교수들이 종신팀용 내지는 정교수로 승진하는 데 하등의 지장이 없는 일이 당연시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조교수가 어떻게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아마 해외유학 및 교환교수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 알 것이다. 종신팀용 탈락률이 반 이상에서 80%까지 육박하기 때

문에 교육과 연구에 몰두하는 것이 바로 살아남느냐 아니냐를 관가름하는 그의 인생이 달린 일이 되고, 대학원생들보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연구활동을 하고 심한 경우 현안 연구들을 수행키 위해 귀가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도 있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의 대학원중심대학의 교수 중에는 연구전담 교수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처럼 주당 강의 10시간만 노동의 의미로써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본인의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은 제도하에서 외국의 철저한 관리, 게다가 연구전담교수 숫자까지 포함한 학생교수비를 따라 가겠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무위도식자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수많은 종류의 취미를 즐기며, 일주일에 2, 3일을 전공과 무관한 사회 및 종교활동에 보내고도 순간적인 임기응변 능력으로 교육·연구의 중요성을 외치며, 연구·교육 능력이 그 척도가 되어야 할 승진심사를 무사히 통과하고 심지어는 대학의 주요한 발전방향도 좌지우지한다면 이러한 대학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따라서 대학원중심대학을 추구하고 이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교수의 충원이 급선무가 아니고, 교수가 강의를 하든 연구를 하든 또는 자기 전공분야 지식의 사회 전파에 애쓰든 간에 이 모든 활동들이 적절히 분석·관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한국 교수들은 12개월 동안의 모든 근무일에 충실히 일한다는 전제하에 월급을 받고 있으므로 방학까지 포함한 1년 52주를 평균내어 적어도 주당 40시간 이상 대학에 관련된 의무 및 책임을 수행하게끔 해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 [국내에 교수 숫자가 3만 명이 훨씬 넘는 대량 교수시대에 이들 교수들이 모두 중세유럽 이래의 전통적 교수들처럼 자율적으로 학문 및 진리추구에 애쓸 것이라고 가정하는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앞서 인용한 글에서 강필호 선생은 “우리나라는 4부류의 교수, 즉 보직파, 정치파, 연구파, 낭만파가 있는데 연구파는 거의 없고, 앞의 세 종류의 교수보다 가장 저열한 부류인 낭만파가 우리나라 교수의 대부분”이라고 진단했다시피 자기가 맡은 강의시간(이 강의조차도 어떤 준비로, 어느 정도의 정성 및 자세로 가르치는지 측정되지 않지만) 이외

의 시간을 완전히 자기의 낭만에 따라 보낼 수 있는 제도 속에서 원론에만 입각한 교수의 증원만으로는 충실한 교육, 더 나아가 충실한 대학원대학이 이루어질 수 없다.

## 2) 圖書館의 藏書數?

우리 교수들의 남 손가락질하기의 또 하나의 유행성 진리는 도서관 문제이다. 물론 도서관에 도서가 가득 있으면 없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러나 이 많은 도서들이 어떻게 활용되는가가 더욱 문제가 아닌가? 100~2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선진국들의 대학은 그 많은 시간 동안 도서를 모아왔다. 따라서 그 대학에서만 구할 수 있는 희귀본들을 포함해서 그간에 누적된 도서 수효도 대단하다고 본다. 서울대도 규장각 도서 등을 포함하여 희귀본도 많고 최신본도 많다. 게다가 교수들이 뜻만 있다면, 전국 아니 세계 우수 도서관에 도서의 복사 및 대출 의뢰를 하던 못 구할 것도 거의 없다. 정말로 장서수 부족을 외치는 교수들이 도서관에 책이 없어서 연구를 못하고 있는가? 학내에 수십 억 가치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꾸며 주었던, 몇 명의 교수가 그 사용법을 배우고 또한 활용하고 있는가? 현대는 정보가 넘치는 사회이다. 다시 말하면 수없이 많이 쏟아지는 정보를 어떻게 간추려서 필요한 것만 볼 것이냐가 문제이지 얼마만한 정보량이 쌓여 있느냐는 전혀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정보사회에서는 지리적으로 자기 바로 옆에 수백만 권의 책이 쌓여 있는가 혹은 태평양 건너서 미국의 어느 대학에 수백만 권이 쌓여 있느냐는 현실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말이다. 또한 교육과 연구에 자주 참고하는 자기 전공서적들을 지금은 국내에서 얼마든지 사 볼 수 있고 과거 박봉의 교수월급시절과 달리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살 여유도 있다고 본다.

지난해 국내 유수의 월간지에 서울대학교 도서관 현황에 대한 구태의연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서울대학교의 L모 교수는 매년 해외여행을 가는데 논문발표라든가 학술연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도서구입차 출국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필요한 외국 출판사 간행의 주요 도서들을

구입할 수 없기에 동료 교수들의 부탁까지 받아서 출국하고 미국에서 책소핑을 한 후 한아름의 책과 함께 귀국할 때 세관원들이 그의 고충을 알고서 무사통관시킨다는 이야기이다. 필자는 이 기사가 기자의 픽션성 글이라고 믿고 싶다. 예를 들어 미국을 보자. 그 곳은 무척 광활하다. 주요 대학들이 많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고 각각의 대학 혹은 출판사들이 한 곳에 몰려 있지 않다. 또한 우리의 교보문고처럼 수많은 책을 대형서점에 모두 전시·판매하는 일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전공서적들을 모두 비치해 놓을 수 없다. 대학서점들도 교과서와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는 책들만 비치할 뿐이다. 그러면 미국의 교수들은 특수 전공서적을 어떻게 구입하는가? 바로 우편물로 홍보되는 책리스트를 보고 우편구입제도에 의해 구입하는 것이다. 이 우편구입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팩스를 이용하면 지리적인 거리를 더욱 느낄 수 없게 해준다. 따라서 도서관 장서 운운하면서 대학원중심대학의 중요 척도를 가늠하고자 하는 현재 대학 및 사회의 멘탈리티가 지속되는 한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 대학원중심대학은 꿈인지도 모른다.

## 3) 構成 集團別 의견 차이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들의 잘못으로 지적된 대학원대학 충실화의 걸림돌이 대학 내부의 집단이기주의라는 것이다. 그 중에서 '학문의 균형발전'이라는 무기와 이공계 편중지원 등의 현안 문제이다. 학문의 균형발전은 누구나 수긍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균형이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중세유럽 대학을 기준으로? 교사양성이 가장 중요했던 시절? 농업이 산업의 주축이었던 시절? 혹은 현재의 하버드, MIT, 동경대학, 옥스-브리지 등이 기준인가? 아무도 여기에 대해 대답을 못하거나 모두가 다른 대답을 하고 있다. 단지, 일단 벌려놓은 학과 혹은 대학이 등분배의 혜택을 보지 못하면 이 天上天下의 진리인 '學問의 均衡發展'이 등장한다. 자기 분야의 현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자기의 전공분야를 토대로 한 인생설계를 얼마나 하고 또한 그 전공분야에서 입신하여 경

력을 키우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 등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저열 평준화로 갈 수밖에 없는 대학 교수사회의 내부적 의사결정 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면 대학 교수사회가 지적적·이성적 판단에 의해 움직인다는 통설은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되고, 세계화를 지향하는 전문화된 대학원대학도 일장춘몽이 될 것이다. 또한 이공계 편중지원에 의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소외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우선 대학이라는 한 공동체 중의 일부가 자신들이 소외되었다고 믿는다면 대학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계층이 대학사회의 중심축이고, 인간생활 및 사회의 움직임에 유효한 역할을 하는 인문 및 사회과학분야인 데에는 더욱 문제가 크다고 본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우선 그 소외감의 근거를 보자. 이공계 학생 우선지원, 이에 따른 교수·학생 우선지원, 정부 및 산업체의 연구비 편중지원 및 연구과제당 연구비 차이 등이 우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학생 및 교수의 지원이 과연 대학 발전의 척도가 되어야 할까? 특히 인문계·사회계 대학원생 육성은 이공계와는 달리 학문후속세대 육성에 더 큰 비중이 주어진다고 보이며, 세계화를 위한 학문후속세대는 그 교육된 세대의 우수성이 더 중요하지, 그 숫자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연구비 문제를 보자. 근원적으로 이공계의 연구비는 연구장비와 재료비 등이 인문·사회 연구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체 금액이 큰 것이다. 물론 프로젝트 및 컨설팅 성격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교비용으로 전기, 물, 시설 등을 사용하고 대학원생들이 회사원처럼 일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이공계 연구과제의 아주 극소수이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공계 자체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앞에서 언급한 연구업적에 의한 엄격한 임용 및 승진제도를 운용하고 교수의 교육·연구 활동이 정확히 측정·관리되면 저절로 해소되리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프로젝트 수행의 경우에는 대학당국에서 관리 및 시설 이용료를 크게 징수함으로써 형평을 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의 대학에서는 교수들의 보수 중 30~50%까지가 연구비로 주어지고 전공분야와 관계없이 같은 호봉의 경우 동일한 보수를 받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연구에 대한 배려는 미국과 같은 대학사회보다는 더욱 평등화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인문·사회계의 연구지원은 다수화보다는 세계화를 추구하고 그 분야의 세계적인 학문수준을 한국에 이식·발전시키며, 세계적인 수준으로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연구팀에게 이공계 연구관리비 일부 혹은 외부기탁기금 등을 활용해서라도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리라고 본다.

#### 4. 맺는 말

앞으로 국내 제반 환경이 선진화하고 국민들의 의식도 선진화하면 우리의 대학들도 대학 지방생 감소로 인한 정원과다현상이 일어나고 일부 충실치 못한 대학들은 정원미달, 그리고 궁극적으로 학과 또는 대학을 폐쇄해야 하는 상황에 도달할지도 모른다. 미국 유수의 대학들도 박사과정 학생의 상당한 비율이 외국인 학생이고 어떤 이공계 분야들은 외국인이 9할 이상을 점하는 사태에 직면해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명문 동경대학, 경도대학 등도 반 이상의 박사과정생이 외국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학과가 많다. 그러나 이들은 그간 세계적인 연구업적을 쌓았고 지금도 대학원중심대학답게 철저한 교육·연구관리, 특히 교수들을 교육 및 연구에 매진케 하는 엄격한 規則과 制度의 덕으로 세계적인 연구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은 느슨한 교육 및 관리하에 국제적 기준으로는 창피할 정도의 연구업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일 우수한 학생들마저 박사과정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시대가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계적인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며, 어떻게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과학기술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그야말로 이를 악물고 우수한 교육·연구 체제를 갖추어 얼마 남지 않은 10년 이내 5년 내에 닥쳐올지도 모르는 우수 박사과정 지원생 부족에 대처해야 한다. 다시 말

하면 앞으로의 짧은 기간에 우수 연구집단의 형성 및 이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의 정비를 서둘러 세계적 연구의 전통과 관행들을 만들어내어 닥쳐올 위기에 대처해야 된다는 말이다. 어물어물 지내다가는 대학원교육 제대로 한번 구현해 보지 못하고 한국에서의 대학원대학은 씨가 마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대비를 위해서는 한마디로 교수 개개인의 의식이 변해야 하고 거의 무제한의 자유와 낭만을 만끽해도 정년시까지 교수라는 직위유지 및 체면유지에 전혀 지장이 없는 지금의 교수관리체제가 바뀌어야 한다. 우선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그리고 이들의 종신임용 등에 확실한 차이와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일단 전임교수가 되면 학교 안팎에서 관리자 혹은 학문을 마친 사람처럼 대접받는 지금의 제도가 유지되는 것이 옳다면 각 대학의 교수 숫자를 더 줄여야 한다. 미국 대학의 종신임용교수 및 일본의 강좌주임교수 숫자만큼(물론 연구전담교수도 제외한)만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외국 대학의 조교수 역할은 박사후 학생이나 고참 박사과정학생이 담당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무 종류의 대학이거나 주당 10시간의 강의가 교수의무의 끝을 의미하는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 학부교육만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는 의무강의 시간을 훨씬 더 늘려야 한다는 말이다. 일례로 일주일에 21시간(7과목)—딱 21시간만—강의하고, 아니 근무하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 산업체 근로자에 비하여 정규 10시간 강의분조차도 이미 너무 많은 보수인데 이것의 2배 가까이 월급으로 받고서 나머지 주당 147시간은 지화자의 세월 속에 온갖 취미와 낭만을 즐기게 하고, 말로는 강의부담에 짓눌려 연구를 못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게 해서 안 된다.

학부중심대학은 학생들의 교육에 더 많은 시

간을 담당하도록 유도하여 그 보수만큼의 신성한 근로의무를 다하게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연구중심대학은 연구에 대한 부담으로 각각 사회의 일원으로서 고심하고 노력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사회적 존경, 직업의 안정성, 충분한 보수, 엄청난 자유 등이 보장되는 이러한 교수관리제도는, 이 제도를 보이게 안 보이게 지탱해 주는 국민이 결국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16세기말 갈릴레오는 29세의 나이로 이탈리아의 Padua 대학 교수로 봉직하면서 그의 학문적 명성으로 인해 전유럽에서 모여든 학생들에게 그 중세시대에 대형강의실에서 2천 명의 학생을 가르쳤지만 과다한 학생부담으로 인해 그의 학문적 발전이 끊어졌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박사취득자의 80%가 대학에 있으므로 이들을 연구에 활용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유행어는 잠재워져야 한다. 박사학위자라고 모두 연구능력이 꼭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기꺼이 연구 활동을 할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우리의 研究中心 大學院大學이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연구 부담이 지겨워서 기꺼이 학부중심대학으로 옮기는 교수가 생겨야 하고 또한 대형 프로젝트 관리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학교를 떠나 산업체로 옮기는 교수가 생겨야 한다. 지금처럼 박사학위취득자 제일의, 아니 절대적인 희망취업처가 —그들의 성격, 자질, 특성에 전혀 상관없이— 교수직이라면 누가 보아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상처럼 현금의 대학원중심대학의 많은 문제점이 모두 교수의 책임이고, 앞으로의 대학원중심대학 활성화의 모든 관건이 교수에의 채택질에 있다고 하면서 교수 자신에 족쇄를 채울 논조를 펴고보니, 지금도 교수라는 직업의 자유와 낭만을 만끽하고 싶은 유혹에 흔들거리고 있는 필자가 과연 이러한 논조를 펴 자격이 있는지 대단히 불안해 하면서 원고의 끝을 맺는다. ■